

인종청소와 코스모폴리타니즘

이삼성 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코소보 사태를 계기로 유고에 대해 전개하고 있는 군사행동에 대하여 논란이 진행되고 있다. 유고 정부는 자신들은 인종청소를 한 일이 없다고 주장한다. 코소보의 독립을 주장하는 무장 게릴라들을 소탕하는 군사작전을 했을 뿐이라고 말한다. 불법적인 무장집단을 토벌하는 것은 주권국가의 당연한 권리라는 논리이다. 그러나 문제는 유고 군대와 경찰, 그리고 파시즘적인 극단적인 우익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로 무장한 준군사조직들이 무장 게릴라를 소탕한다는 명분으로 실제로는 회교도 집단 전체를 남자들은 체계적으로 학살하고 여자들은 체계적으로 강간을 해서 그들의 공동체와 그 정체성을 철저히 뿌리뽑아 없애려는 말 그대로 인종청소를 전개해 왔다는 데 있다.

그것은 국가주권의 문제가 아니며, 국제사회는 유엔을 통해서 인종청소를 포함한 제노사이드나 고문을 포함한 모든 반인류적 범죄(crimes against humanity)는 국가의 경계를 넘어서 책임있는 개인들을 처벌할 수 있다는 국제적 규범을 형성해 왔다. 그것은 국가주권의 영역이 아니라 전 인류공동체 공동의 행동이 정당하게 요청되는 영역으로 된 것이다.

미국과 나토의 군사행동은 물론 그 방식에서 중요한 문제점들을 드러냈다. 그러나 인종청소의 책임자들인 유

고 정부와 그 우익 군사조직들을 목표로 한 이번의 공습 자체를 비판할 수는 없다. 우리가 정작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또 앞으로 지켜볼 일은 반인도적 범죄가 장차 어떤 지역에서든 재발할 경우에 그 지역에 대한 경제전략적 이해관계에 앞서 과연 인도적 가치를 기준으로 적절히 그리고 신속하게 개입하는 일관성을 보일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그리고 국제형사재판소와 같이 반인도적 범죄를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방지하고 처벌하기 위해 유엔이 주도하여 추진해 온 국제제도들에 대해서 미국은 왜 외면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 우리의 비판의 대상이어야 하고, 이런 면에서 미국 외교정책의 방향수정을 촉구해야 한다.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 주도의 이번 공습을 비판할 때 '국가주권 침해'를 들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유고에 의한 인종청소라는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처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인 국가들이다. 러시아는 체첸 소수 민족의 분리독립 운동을 무력으로 억압한 경력이 있고, 중국은 티벳과 대만 문제 때문에 국가주권을 앞장서 주장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리고 국제형사재판소 설치에 비협조적인 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중국도 마찬가지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일단 미국과 나토의 공습으

로 인해 유고와 서방 간의 군사적 충돌이 시작되었고, 그 과정에서 유고의 반인도적인 인종청소 행위가 더 강화된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있다. 사실상의 반인류적 전쟁을 먼저 시작한 것은 서방 이전에 밀로세비치가 이끌고 있는 유고의 극우 민족주의 정권이다. 그는 이미 보스니아에서 보스니아계 세르비아 정치 및 군부 지도자들과 협력하여 1992년에 잔악한 인종청소를 감행한 바 있다. 서방은 침묵을 지켰다. 그 인종청소는 1995년 세레브레니카에서 8,000명의 회교도 학살로 다시 불이 붙고 있었다. 그 한참 후에야 미국과 나토는 공습으로 협박을 하는 등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고 그것이 해결의 실마리가 되었다. 밀로세비치는 특히 지난 1998년부터 코소보에서 마찬가지로의 인종청소 작업을 전개함으로써 인류에 대한 전쟁을 이미 진행해 왔던 참이다. 이 전쟁은 어떤 형태로든 국제사회가 중단을 시켜야 하는 것이었고, 평화협상으로 통하지 않는 유고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무력을 행사해서라도 행동해야 할 이웃으로서의 도덕적 책임과 정당성을 갖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이 이번에 유고에 대한 전쟁 행위를 함으로써 비인도적 사태에 대하여 일단 행동을 하게 된 것이지만, 그것이 갖는 긍정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정당성에 국제사회 일부가 회의의 시선을 보내는 이유는, 현대사에서 미국과 서방의 군사개입의 비밀관성 때문이다. 미국과 서방의 군사적 행동이 그것이 처벌을 목표로 했던 인도적 재난을 가중시키는 경향이 있을 때, 그 동기와 개입행태에 대

한 비서방 세계의 회의와 비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미국과 서방뿐 아니라 우리 나라를 포함한 세계 전체가 국제사회의 보다 민주적인 참여를 전제로 한 동의를 바탕으로, 현재 및 미래에서의 갖은 형태의 반인류적 범죄에 대한 공동개입의 기준과 바람직한 개입의 방식에 대한 규범을 형성해 가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인도적 개입은 강대국들의 일관성 없고 편파적인 기준에 따른 비인도적인 강제력 행사에 불과하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냉전시대의 이데올로기적 긴장 속에 억눌렸던 서로 다른 인종과 문화, 역사와 종교의 얽히고 설킴으로 인한 갈등이 반인류적 범죄로 폭력화할 가능성이 증가되었다. 이런 때일수록 대학교육에서 평화교육에 대한 강조가 필요하다. 그것은 문명적 이해를 위한 보다 열린 교육과정들이 요청된다는 것을 가리킨다. 진정한 국제화교육이란 통상주의 일변도의 교육이 아니라, 정신과 문화의 코스모폴리타니즘을 뜻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

이삼성

고려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 정치학과 석사, 미국 예일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저서로 『미국외교이념과 베트남전쟁』, 『현대미국외교와 국제정치』, 『미국의 대한정책과 한국 민족주의』, 『한반도 핵문제와 미국외교』, 『미래의 역사에서 미국은 희망인가』, 『20세기의 문명과 야만』 등이 있다.